

“임대차 3법 자리잡는 중... 일자리·주거 등 청년의견 수렴”

김부겸 인사청문회 첫날

“공수처·임대차 법안 단독처리 좀 더 숙성시켜 대화 했어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전력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러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 ‘의혹’ 비판 중심으로 열렸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 질의에 답하면서 의혹 관련 질타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혹에 대한 비판을 두고 김 후보자는 반박하기도 했다.

청문회 첫날인 6일 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7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점을 두고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꾸짖음을 명심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보

다 빠른 일상 회복과 함께 ▲부동산 안정 ▲민생 돌봄 ▲청년 정책 활성화 ▲국민 통합 등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 것이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내가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나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을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국민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좀 더 숙성을 시켜 대화를 했더라면 국민 납득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청년층 민심이 달라진 것과 관련 “세습이나 양극화 같은 단어가(마음) 아프다”며 직접 목소리를 듣고 제

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정책과 관련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별사면 요구와 관련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하면 경제계를 만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故)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은세습 사면’이라는 지적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요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통합’을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 통합이나 국민이 전직 두 대통령 일들에 대해 마음으로 용서했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

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전력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 저서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점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 글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드린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 외교 폐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도 자녀를 외교에 입학시켰다는 지적에 “제가 마치 제 자식을 외교에 넣고 다른 사람이 외교에 갈 수 없게 폐지에 앞장섰다는 건 납득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과 함께 공정선거 관리, 부동산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 정책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상품 끼워팔기” vs “경쟁제한 증명 필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학술토론회

이항 고려대 교수 “앱마켓 입점, 결제시스템은 별개”

주진열 부산대 교수 “수수료, 과도한독과점인지 불분명”

구글이 추진하는 플레이 스토어 내 인앱(In-app) 결제 의무화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 김종민 교수는 6일 공청회와 고려대 ICR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앱 배포시장으로 시장을 확정하고 구글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

결제 시장에서 외부 PG(지불결제)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앱 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 소비자의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이항 교수도 “앱마켓 입점 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글이 축적한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증대, 경쟁제한, 거래상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올해 1월부터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콘텐츠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인앱 결제 강제화 적용 시기를 오는 9월로 미루고 군소 개발사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文 대통령, 문승욱 산업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4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11시경 문승욱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6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 2050 이행,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장교 특혜 논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매매 후 차익을 실현한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진행했다.

산자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같은 날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보고서는 ‘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됐다.

보고서에서 여야 의원들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 과정에서 나온 증여세 탈루 의혹이나 부동산 시세차익 실현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훈 기자

용접공 등 숙련인력 기술 디지털화해 전수

산업부 ‘고도화기술개발’ 신규추진

용접공의 고난도 작업노하우를 디지털화해 증강현실(AR) 용접 가이드를 개발하는 등 산업 현장 숙련 인력 기술을 디지털화하는 정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돼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인 ‘암묵지(노하우)’를 디지털

화해 AI분석하고, A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돼 ▲휴먼팩터 기반 수동용접기술 현장지식자산화 시스템 기술개발 ▲검수작업자인지능력 증강을 위한 디지털 검수 공정 테이블 및 편의기술 개발 ▲작업 노하우 기반의 생산장비 운영 및 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제조산업 현장지식자산화 및 확산을 위한 업종간 핵심역량 분석기술 개발 ▲노동집약적 제조공정의 숙련공 노하우 확산 기술개발 등 5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은 고숙련자의 핵심역량을 분석해 디지털자산화하고, 노동집약적 공정과 디지털 산업지식 융합을 통해 단계 높은 수준의 공정표준화, 생산성향상을 중점 고려해 추진된다. 또 AR 등 신기술을 품질관리에 적용해 최종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제조공정의 노하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에 대해 5월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사업주관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美 수출입 식물검역 ‘디지털 증명서’ 전환

농식품부, 분실·위조·통관지연 막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해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

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까지 전자식물검역증명서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작년 부터는 국가간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범운행을 진행해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됐다.

/세종=한용수 기자